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연구소 편집위원

## 김정은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자금

수령경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통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령경제는 공정경제, 특권경제, 당경제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황장엽이 김정일의 통치를 위한 경제를 ‘수령의 개인경제’로 개념화한 이후 수령경제라는 개념으로 유포되었다. 황장엽은 수령경제를 당경제와 군경제로 포괄했지만 수령경제의 핵심은 당경제라고 할 수 있다.

황장엽은 북한에서 수령경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즉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지정된

이후 국가경제로부터 당경제를 분리시키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기술 장비가 좋고 특히 외화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소(특히 금광)를 당경제에 포함시켰다. 이후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루도록 당경제체계를 발전시켰다. 김정일은 제일 먼저 주요 수출부문을 당경제에 편입시켰는데, 1974년과 1978년 사이 대성무역상사를 당경제로 이전시키면서 북한의 주요 수출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금수산 5경리부에 속하면서 김정일의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능라888무역’이 1975년에 설립되었다.

결국 당경제는 김정일의 당 실권 장악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우상화 사업, 대남사업, 그리고 특권층의 소비재 조달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김일성 비밀별장의 존재나 특권층의 전용의료, 주택서비스, 외제차 제공 등을 비롯한 고급소비재의 공급은 모두 특별한 조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수령경제의 핵심은 당경제로서 당 39호실(대성경제연합체)이 맡아보는 대성총국(조선대성무역총회사)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산, 무역회사들, 당 38호실 소속의 호텔, 외화백화점, 식당, 상점들, 당 재정경리부의 무역회사, 식당, 상점, 농장 및 목장, 공장들, 당조직지도부 행정부문에서 관리하던 조선민족보험총회사, 727지도국, 2호지도국, 수도건설총국 등의 경제단위들, 당 민방위부의 114지도국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수령경제, 북한 전체 경제의 1/4 이상 차지

북한 정권 차원에서 공식, 비공식 또는 음성적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외화는 거의 전적으로 수령경제에 의해 집중적으로 관리배분된다. 그중 대표적인 수령경제의 수입원은 무기수출이다. 즉 무기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수령경제의 관할로 들어간다. 일찍부터 군수산업을 육성해 온 북한은 1980년대까지 기본무기·장비 수출에 이어 1990년대 이후

에는 미사일도 수출하는 등 제3세계 국가에서는 드물게 무기수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으로써 무기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과거보다 감소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둘째, 음성적 외화벌이도 수령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음성적인 외화조달 중 대표적인 것이 조총련을 통한 자금과 마약 등의 밀수와 위조지폐 등 불법적인 수입도 포함된다. 특히 북한은 마약을 군부대와 일반농장 등에서 공공연히 재배하고 있으며, 화폐와 담배의 위조나 각종 밀수, 밀매 등 음성적 원천을 통해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음성적 자금은 김정일의 금고로 들어가 수령경제의 원천이 된다.

셋째, 남북경협 및 국제원조도 수령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은 북한의 가장 손쉬운 외화벌이라는 점에서 수령경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약 5만여 명의 북한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매년 4~5천만 달러가 임금으로 북한 정부에 직접 지급되고 있으나 북한은 이중 극히 일부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거의 전부 현물성 지원이기 때문에 외



▲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

화벌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보아 이 물자들도 결국 국내자원의 절약이 아니면 여타 민간수입 절감을 통해 수령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주민들을 동원한 외화벌이 사업을 통

해 벌어들인 자금의 대부분이 수령경제로 편입된다. 김정일의 통치자금, 비자금 관리는 노동당 39호실에서 하는데 39호실은 매년 외화별이 목표를 작성해 산하 외화별이 기관에 하달하고 각 시도, 군당에 문건으로 발송한다. 지방에는 29호실 소속 '5호 관리부'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외화원천이 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외화원천은 금, 짐승가죽, 송이버섯, 박하기를 등이며, 그 외에도 해산물, 광물 등 해외에 팔 수 있는 모든 물품이 된다. 주민들은 '충성의 외화별이 운동'이 왜 벌어지는지 잘 모른다. 당 비서들은 충성의 외화별이로 구성된 당자금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내줄 선물자금으로 쓰인다고 선전한다. 그 지방의 모든 외화별이 원천은 '5호 관리부'에 집중되며 이렇게 조성된 외화는 39호실 지도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앙당 39호실에 상납된다.

이러한 수령경제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국가 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국가자금의 배분에 있어 50~70%가 제2부문(군사경제)과 제3부문(당경제)에 돌려지고 있다는 추정에서부터 전체 북한 경제의 23%를 차지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다양하지만, 북한 전체 경제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수령경제는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생산자원의 독점적 점유와 외화별이를 통해 마련된다. 이 자금은 정치적으로 체제보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수 특권화된 관료들의 충성과 지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중하위 관리들에게 하사하는 '선물' 경비, 현지지도 이후 생산단위에 투여되는 '주식펀드'의 자금으로 사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령경제를 위해 벌어들인 자금은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선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북한이 지난 20여년 동안 끊임없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왔고 이러한 핵·미사일 개발 비용은 북한의 전체 재정규모로 볼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

이며 이를 수령경제가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한 수령경제는 측근들과 핵심군중들에게 하사하는 선물용으로 쓰인다. 김정일은 생전에 주민통제를 위해 북한체제를 만들고 있는 측근들에게 ‘선물공세’를 해 왔다. 당, 행정기관, 도, 시, 군의 책임간부들에게 수시로 ‘선물’을 내려 보내 그들로 하여금 체제를 받들기 위해 심신을 다 바치도록 독려했으며 김정일 자신의 우상화와 황제 같은 초호화생활을 위해서도 썼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김일성, 김정일 가계의 우상화 선전물 유지 관리, 김정일 개인의 별장 등 호화사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

## 수령경제가 시장왜곡과 경제악화의 주범

북한에서 수령경제는 국민경제 또는 인민경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수령경제는 2000년대 들어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혁명자금’ 상납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중앙당 38호실과 39호실을 중심으로 제2경제, 중앙당 특수부서들, 호위사령부, 인민무력부의 국 단위 조직들, 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특수단위들에 의한 수출입 외화벌이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혁명자금이란 당자금으로도 불리는데 각 기관, 기업소 소속의 무역회사들이 계획지표와는 별도로 충성의 표시로서 최고지도자에게 상납하는 외화자금이다. 이러한 특권기관들은 외화벌이 수출원천을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의 상품유통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이들 국가기관들에게 지대 수취의 형태로 특혜적 외화벌이 사업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이 기관들의 외화벌이 관련 간부들이나 상층 간부층의 부패가 시장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에서는 수령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관리 없이 인민들의 이익이 아닌 소수 특권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수령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엘리트들이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며 공식영역과 불법영역을 넘나들면서 북한 경제 구조 자체를 형해화시켜왔다. 특히 내각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인민경제는 수령경제의 외화벌이사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수령경제는 국내 농민시장에서 걷어 들이는 터무니없는 헐값 상품을 자본주의 시장에 국제가격으로 독점 수출하여 천문학적 고이윤을 획득하여 그 이윤을 인민경제, 즉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령경제는 수령의 가산국가적(家産國家的) 소유라는 전근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수령경제는 공식경제에 기생하여 인민을 착취하며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경제가 당면한 지속적인 위기는 바로 이러한 수령경제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도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장기간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폐쇄적 경제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없이 국내자원에만 의존한 산업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경제난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체제 하에서 북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령경제와 군사경제에 투입하는 등 재생산보다는 소비재로 낭비하였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생산을 통한 이윤을 재생산에 투입하는 확대재생산 보다는 생산을 통한 이윤뿐만 아니라 본전까지도 수령경제의 명목으로 낭비하면서 축소재생산, 즉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